

비상경제장관회의 **경제부총리** 모두발언(1.4)

- 지금부터 2023년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올해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만큼,
모든 경제부처는 원팀(One-Team)으로 합심하여
당면한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

[① 설 민생안정대책]

- 먼저 예년보다 이른 설 명절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작년 한해 엄중한 물가여건이 지속되었으나 농어민, 기업, 소비자 등 여러 경제주체들께서 어려움을 분담해주신 덕분에 최근 물가가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조금씩 안정세를 되찾아가는 모습입니다.
- 하지만 금년 전체로 보면 물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하향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나, 당분간은 상방압력 지속적으로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
 - 특히,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요인이 잠재해 있는데 더해, 이른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.
 - 또한,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확대되고,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도 증가하면서, 취약계층 중심으로 겨울철 어려움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이에 정부는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,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 - 먼저, 사과·배·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 평균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역대 최대규모인 20만 8천톤을 공급하고,
- 농축수산물의 경우 총 300억원의 할인지원을 하겠습니다.

- 둘째, 금년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할인을 대폭 확대하고, 이번 동절기('22.10~'23.4)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15만 2천 원(기존 14만 5천 원)으로 추가 인상하겠습니다.
- 셋째, 대체휴무일을 포함한 설 연휴 4일간(1.21~1.24)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편의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- 아울러, 아동·청소년·노인·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와 저소득층 먹거리·교육·교통 등 지원이 설 전후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[㉔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]

- 다음은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올해 경기는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저하고의 흐름이 전망되는 만큼, 정부는 연초부터 신속한 재정집행과 주요 공공기관 투자의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.
- 우선,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% 이상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.
- 이를 위해 주요사업 예산 240조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전절차를 가속화하고, 예상되는 집행 지연요소도 선제적으로 점검·해소하겠습니다.
- 특히,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자가 이미 확정된 사업은 국비를 즉시 교부하고, 공모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상반기 중 최대한 신속히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.
-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역대 최고수준인 각각 60.5%, 65%를 상반기에 집행하겠습니다.
- 또한, ①일자리 사업, ②민생 및 ③물가안정 사업의 경우, 주요 사업별 전달체계·집행과정을 각별히 관리하겠습니다.
- 무엇보다 연초에는 고용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, 참가자 모집·채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 내 관리대상 일자리 예산의 70%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.

- 민생·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사업도 선별하여 매월 집행 실적을 꼼꼼히 점검하고, 집행상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.
- 아울러, 최근 연간 100조원*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겠습니다.
* ('18) 66.9조원 → ('23년) 102.3조원(총지출 638.7조원의 16.0%)
- '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'을 구성·운영하여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,
- 보조금법을 개정하여 외부기관을 통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*하고, 관계부처 합동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.
* (정산보고서 검증대상) 3억원 → 1억원 이상, (회계감사 대상) 10억원 → 3억원 이상

[㉓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]

- 다음, 주요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투자집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-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27개 주요 공공기관에서는 올해 총 63.3조원의 투자를 추진하고,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규모인 55%(34.8조원) 수준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는 한편,
* 투자집행 실적 : ('19) 54.1 → ('20) 61.0 → ('21) 64.8 → ('22) 65.5 → ('23 목표) 63.3조원
** ('20~'22.上) 평균 32.6조(50.9%) ('22.上) 33.9조(51.3%) vs ('23.上) 목표 34.8조(55.0%)
- 주거안정, 에너지, 교통·물류를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중점 투자해 나가겠습니다.
- 아울러, 공공기관 예타 기준(기존: 1000억원)을 2,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, 투자집행 상황을 매월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.
-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